# 광주시·전남도, 민주당에 SOC·성장기반 예산 확충 건의

## 민주 지도부, 예산정책협의회…국비 확보·지역 현안 논의
## 광주 지역 화폐 등 삭감 예산 복원…전남 국립의대 신설 등

광주시와 전남도가 더불어민주당과 예산정책협의회를 열고 사회간접자본(SOC)과 인공지능(AI) 등 성장기반 사업 예산 확충 등을 건의했다.

전남도는 11일 도청 왕인실에서 열린 예산정책협의회에서 민주당 지도부와 지역 국회의원들에게 내년 국비 예산 확보 협조를 요청했다.

협의회에는 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와 송갑석 최고위원, 김민석 정책위의장, 서삼석 예결위원장, 신정훈 전남도당위원장, 지역 국회의원 전원이 참석했다.

전남도는 이날 협의회에서 전남 발전을 위해 필요한 10건의 정책적 지원 활동과 12건의 예산 확보에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정책 지원사업으로는 ▲광주~영암 아우토반 국가계획 반영 및 예타 면제 ▲광주~고흥 고속도로 국가계획 반영 ▲광주~화순 광역철도 국가계획 반영 ▲목포~무안 남악~오룡을 잇는 전남형 트램 구축 ▲전라선 고속철도 예타 선정 및 조기 통과를 통한 호남권 SOC 확충에 적극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또 ▲미래첨단소재 국가산업단지 지정 ▲남해안 발전을 위한 '남해안 종합개발청' 설립 ▲무안국제활성화 및 광주 민간·군 공항 통합 이전의 당위성과 필요성에 대한 국회 차원의 설득도 요청했다.

전남지역 국립의대 신설과 지방소멸 위험지역이 많은 전남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기회발전특구 조세특례 도입, 농·수협중앙회 등 공공기관 전남 이전에 대해서도 힘을 실어줄 것을 건의했다.

광주시도 이날 오후 광주시청 중회의실에서 민주당 지도부와 이병훈 광주시당위원장, 지역 국회의원들과 협의회를 열고 성장기반 사업을 위한 국비 확보 등을 건의했다.

광주시는 중점 추진 중인 인공지능(AI)과 미래차 산업 예산이 정부 예산안에 전년 대비 38.3%포인트 삭감됐고, 연구개발(R&D) 예산은 시가 요구한 예산의 74%포인트가 깎였다며 지역 성장동력이 상실되지 않도록 힘을 실어달라고 요청했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특별회계 사업 예산도 올해(514억원) 대비 3분의 1 수준으로 삭감됐다며, 사업이 중단되지 않도록 올해 수준의 국비 반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지역화폐 예산이 전액 삭감되고 청년 일자리 사업과 사회적 기업 지원 예산도 대폭 삭감됐다며 필수민생사업인 만큼 당론으로 예산을 확보해 달라고 건의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광주 경제는 중국 수출 비중이 높은데 한미일 동맹 강화로 인한 금융난·인력난·판로난을 겪고 있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따른 국민 불안도 크다"며 "지역 성장 기반 예산과 필수 민생 예산을 반드시 확보하도록 도와달라"고 말했다. 그는 "정율성 사업은 1988년 노태우 정부부터 시작됐다"며 "정율성 역사공원은 시비 48억원 규모의 사업인 만큼 우리 광주시민과 광주시에 맡기고 저희가 현명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광주시와 전남도가 건의한 당면 과제에 대해 당 차원의 지원 방안을 면밀하게 살피고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며 "특히 지역화폐·청년 일자리·사회적기업 등은 국가 전체의 문제인 만큼 당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11일 오후 광주 서구 광주시청 중회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 광주시 관계자들이 예산정책협의회를 앞두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최현배 기자choi@kwangju.co.kr

# 이재명 "이종섭 국방장관 탄핵·특검 추진"

## 채 상병 수사 외압 확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채모 상병 순직과 관련, 이종섭 국방부장관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단식 12일째인 이 대표는 11일 입장문을 통해 "국방부 장관 탄핵은 국민의 명령"이라며 "이 장관을 탄핵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은 장관을 해임하라는 국민의 요구를 거부했다"며 "국민의 명령에 항명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정부질문 과정에서 이 장관이 법을 어기고, 부당하게 수사에 개입한 사실이 낱낱이 드러났다"며 "그런데도 대통령이 장관을 해임하지 않은 건 수사 외압이 대통령 지시였음을 스스로 증명한 셈"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국민의힘은 장관 탄핵이 '안보 공백'이라며 또다시 국민 겁박에 앞장선다"며 "진실마저 은폐하는 장관을 감싸는 게 집권여당이 할 도리냐"고 반문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탄핵을 시작으로, 특검을 통해 이번 사건의 진상을 낱낱이 밝히겠다"며 "국민이 바라는 철저한 진상 규명을 반드시 이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오광록 기자 kroh@

# '단식 13일째' 이재명 대표, 오늘 또 檢 출석

## "부당 소환 당당히 맞설것"…민주 "검찰권 남용시 총력 대응"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2일 검찰에 다시 출석하기로 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검찰을 향해 '정치 검찰'이라며 십자포화를 퍼부은 가운데 당내에서는 이 대표의 단식이 12일째 접어들면서 건강이 급속히 악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출구 전략이 논의되는 분위기다.

민주당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11일 국회 브리핑에서 "이 대표는 12일 오후 검찰에 한 번 더 출석한다"며 "검찰의 부당한 추가 소환 요구에도 불구하고 12일 당당히 응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검찰이 이번 조사마저 무도하게 조작하는 등 검찰권을 남용할 경우, 당이 할 수 있는 모든 권한을 사용해 대응할 수밖에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이 대표는 지난 9일 검찰에 출석해 8시간 가량 조사를 받았지만, 수원지방검찰청은 추가 조사를 위해 이 대표 측에 12일 다시 출석한 것을 통보한 바 있다. 당초 이 대표 측은 12일 재출석이 어렵다는 뜻을 밝혔지만, 일정을 조율한 것으로 보인다.

단식에 따른 체력적 한계로 이재명 대표가 불참한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도부는 검찰에 대한 성토를 쏟아냈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대선 때 경쟁자였던 야당 대표를 이렇게 탄압하는 이런 정권은 처음 본다"며 "박정희, 전두환 때도 이러지는 않았다. 분명 끝이 안 좋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고민정 최고위원도 "목숨을 건 단식 앞에 검찰은 정치 수사, 망신 주기 수사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주장했으며, 박찬대 최고위원은 "수사가 아닌 스토킹이자 고문"이라고 거칠게 비판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단식 중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민주당 중진 의원들은 이날 이재명 대표를 찾아 단식 중단을 요청했다. 국회의장을 지낸 박병석 의원과 김영주 부의장, 정성호·우상호·안규백 등 중진 의원들은 "지금 단식을 한 지 열흘이 넘었고 건강과 체력에 한계가 온 것으로 보인다"며 "이제 단식을 중단하라"고 권유했다.

이에 이 대표는 "이게 일시적인 행태라면 해결점이라도 있을 것 같은데, 갈수록 끝도 없이 더 심화될 것 같아 그게 제일 걱정"이라며 정부·여당을 겨눴다. 그러면서 "권력이 추구해야 할 제일 핵심적인 과제인 민생이나 평화나 안정이나 안전 같은 것에 전혀 관심이 없는 것 같다"면서 "이 기조를 바꾸지 않으면 우리 야당이 하는 일도 너무 제한적"이라며 단식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당내에서는 이 대표가 단식 투쟁에 돌입하면서 내건 윤 대통령의 대국민 사죄, 전면적 국정 쇄신 및 개각 등의 요구는 수용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점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나서 단식 중단을 권유하는 출구 전략 등이 거론되고 있다. 당내 일각에서는 결국 이 전 대표가 이번 주말을 기점으로 체력적 한계에 도달, 병원에 입원하면서 단식이 중단되지 않느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권칠승 수석 대변인은 최고위 직후 기자들을 만나 "아직까지는 이 대표가 단식을 이어가겠다고 하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그는 문 전 대통령의 방문 계획에 대한 질문에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답했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여의도 브리핑

# 신정훈 "감액된 독도 홍보 예산 증액해야"

신정훈 국회의원이 감액된 독도 관련 홍보 예산을 증액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신정훈(나주화순) 국회의원이 11일 해양수산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4년 예산안' 자료를 분석한 결과, 내년 독도 '홍보·학술사업' 예산안은 8억6800만원으로 올해 10억원에 비해 1억3200만원(13.2%) 감액된 것으로 나타났다.

독도 '홍보·학술사업'은 관련 민간단체 지원, 독도탐방 지원, 외국인 독도체험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 중 독도 관련 민간단체 지원, 독도 탐방 관련 예산이 감소했다.

최근 독도 '홍보·학술사업' 예산은 2020년 8억1000만원에서 2021년·2022년 9억원, 2023년 10억원으로 증가세였으나 내년 정부 예산은 감액됐다.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동해 표기 등과 관련 갈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독도와 동해에 대한 국제사회에 대한 홍보가 중요한 시점이다. 실제 '2022년 보조사업 연장평가'에서는 '독도 지속가능이용 및 관리사업은 영토주권수호를 위한 주요시설 관리강화 및 국제사회의 홍보강화를 위해 사업관리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반면, 일본 정부는 내년 예산안에 외국을 상대로 영유권 주장을 홍보하기 위한 명목으로 약 3억엔(약 27억원)을 편성했다.

신정훈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후쿠시마 핵 오염수 방류에 대해 일본 정부에 한마디도 못하는 사이 일본의 독도 침탈 야욕이 강화됐다"며 "해양영토 주권 수호를 위한 예산 증액에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건물·주택 리모델링, 신축, 지붕공사
건축시공, 설계, 견적, 리모델링, 상담문의

MODERN 모던건설 사무실 광주시 북구 자미로45(신안동) 공 장 광주시 서구 서창2길3(서창동) 시공문의 전상하 T. 062)531-3530, H. 010-9229-3530